

화요일



강창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농촌에 살어리랏다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은 곧 농촌소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68만 명이었던 전남의 농어가 인구가 2020년에는 34만 명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고령화와 더불어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것은 바로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이 직업과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고 있어 마을의 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이랄까 한 편에서는 농촌에 살려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도 꾸준히 있었다.

농촌에 살고자 이동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전국에서 매년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동했다. 전남 지역에 신규로 이동한 사람 수만 보면 매년 약 4만 명 정도가 된다. 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한 사람 중 농어업에 종사하면 귀농 또는 귀어, 그렇지 않으면 귀촌에 해당된다. 귀농·귀촌의 주된 목적은 기업 승계 또는 직장 취업 등 일자리지만 자연환경이 좋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이동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비경제적 동기에 의한 귀농·귀촌이 정착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귀농·귀촌인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가장 높아 지역의 고령화율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먼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통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귀농·귀촌 기준은 도시를 동 지역, 농촌은 읍·면 지역으로만 한정한다. 따라서 대도시 주변 읍·면 지역

아파트 거주민이 귀농하더라도 현행 범주에서는 제외된다.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 역귀농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한 조사에서 역귀농율이 8.6%인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비율이 다시 농촌을 떠났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중요하지만 몇 명이 다시 나갔고 어떤 이유로 나갔는지 파악하는 것은 향후 귀농·귀촌 정책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주거·의료 등 인프라 지원

주거 지원 및 지역 인프라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비 귀촌인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가장 높았다. 농어촌 주민 만족도 조사를 보면 의료 서비스, 문화 및 여가시설, 생활인프라 등에서 여전히 도시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고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ICT 기술을 농업에 활용한 스마트팜과 같은 신기술을 장려하는 등 귀농인의 소득기반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꾸준한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농촌에 활력을 높이고, 농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친척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들었다. 그분은 전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 혼자 거주하고 계셨었다. 유년시절 방학 때 그곳에서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던 터라 작년에 그분을 뵈기 위해 방문했다. 당시 마을에 사는 주민과 대화한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 마을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고령의 혼자 사는 노인들이라고 하였다. 돌아가시는 주민들이 점차 늘면서 마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는 한탄과 걱정을 하셨다. 지방의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실감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전남지역 매년 4만 명 유입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있다.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누어 측정한다. 지방소멸위험지수로 보면 전남은 2017년에 이미 위험단계에 진입하였다. 가임기 여성 수는 줄고 고령 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방소멸이 주로 농촌

기고



유민
안전보건공단 전남본부 경영총괄부장

질식사고 없는 안전한 전남을 위해

는 장소를 밀폐공간이라고 정의하고 18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지 않아도 환기가 부족하고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모든 장소가 밀폐공간이 될 수 있다.

밀폐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의 산화, 질소·아르곤 등 불활성가스의 사용,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부패, 유해가스의 누출·유입 및 연료의 연소 등이 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떨어졌을 때 수분 이내에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일터에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해당 공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밀폐공간이 파악됐으면 아무나 해당 장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환기량에 맞춰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

고, 밀폐공간 내 공기를 적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환기팬 등의 장비를 사용해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또한, 환기를 해도 적정공기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기가 어려운 장소의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착용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밀폐공간 작업을 하다가 동료 작업자가 갑자기 쓰러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밀폐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데, 이 경우 제2, 제3의 재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먼저 119에 연락하고,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해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적절한 장비가 없는 경우에는 안타깝더라도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기온상승에 따른 작업 중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질식 위험장소에 보호장비 없이 그냥 들어가면 손을 톨도 없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라며,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우리 전남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질식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독자광성

연일 계속되는 고온현상에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량 에어컨을 트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에어컨 과열 또는 차량 내 인화성 물질 폭발로 인한 화재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여름철 차량화재의 상당수가 차량 내 에어컨의 장시간 사용에 따라 엔진과열 등 전기적, 기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덥다고 차량 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가동한 채 잠이 들 경우 내부 공기 감소에 따른 질식과 저체온증에 의해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식이 있을 때 너무 추운 에어컨 냉기를 느끼면 졸린다거나 꿀 수 있지만 잠이 깊어 들어 의식이 없을 때에는 조절 능력이 없어 속수 무책으로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다. 특히나 공기 순환이 자유롭지 않은 지하 주차장 등에서의 에어컨 가동 후 취침은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

여름철 차량화재 안전수칙 준수

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너무 냉각시킨 차량 실내온도는 호흡근란 내지 심근경색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자동차 실내 온도가 엄청 치솟고 있어 라이터나 방향등 등 가스를 이용한 제품을 차내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어 자칫 고온에 의한 폭발로 이어지면서 화재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차량 내 질식화재사고는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량 내에서 에어컨을 켜고 숙면을 취하는 것은 금하고 운전 중에도 수시로 내부 공기를 환기시키는 절대 안전수칙을 지키자.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성남		편집국장 姜馨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월간국 (062) 720-1007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회부 (062) 720-105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2부 (062) 720-1043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위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시·도, 정치권 군공항 이전 역랑 모으자

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그간 활동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광주시에 전달하면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률 제·개정, 대구공항 이전 방식을 차용한 '광주형 공모단' 마련 등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인수위의 인식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없다. 국비 지원을 위한 기존 노력과 대응을 보완하고 있다. 다만 군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광주시는 물론 전남도, 지역 정치권에 대한 대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언급이 있었다면 하는 바람이다.

국비 지원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구·경북은 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국민의 힘 대구지역 의원들은 최근 신공항특별법 발의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또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특별법을 통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경북은 특히 13조7,0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 전액을 국비로 받는 부산 가덕도신공항과의 경쟁을 위해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 시절에 진도를 빨리 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경북이 통합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과정에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군 공항 이전 로드맵에 '여유'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

대구지역은 통합신공항을 관공공으로 키우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선 만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행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대구·경북 신공항과 부산 가덕도공항이 조기 개항을 목표로 경쟁하고 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추진 방향만 주로 논의할 뿐 손에 잡히는 진전은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이제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지다

민선 8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반도체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분야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지구'를 활용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전격하고 있는 것으로, 앞선 기술력과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 넓은 입지 등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시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지난 5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상생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시도는 광주·전남이 가진 명확한 강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유치 당위성을 어필하고 있다. 광주는 오는 2024년까지 첨단3지구에 조성중인 AI집적단지를 통해 각종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 반도체산업과의 긴밀한 연계가 강점이다. AI데이터 센터의 경우 국내 기업이 개발한 AI반도체를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등 생산시설과 시장을 있는 주요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장성 인근의 300만평 등 너른 부지와 한 국내너지공대를 통한 인력 수급은 전남의 장점이다. 혁신도시에 입지한 한전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차별화된다.

양 시도지사 역시 연일 특화단지 유치를 이사회하며 광복 행보에 나서고 있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 8일 대동행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강력 요청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새 정부 기회발전특구의 첫 번째 모델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주면 광주·전남이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회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 이름을 올리는 배수진까지 친 상태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은 지방시대를 전명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힌다. 그런 면에서 낙후된 지역을 살려 보겠다는 반도체를 꺼내든 시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더불어 입지 등 경쟁력을 갖춘 광주·전남은 반도체 특화단지의 최적지다.

'방학 중 무상급식' 원만한 타협점 찾아야

기지수첩



최환준

사회부 차장

교사·조리사 등)을 일괄배치하며, 급식 학생수에 따라 조리인력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 교육청은 지난 8일 각급 학교에 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 방안에 대한 공문을 배포했다. 직영급식 대상 학교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근무 동의를 거쳐 급식 방식을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방학 중 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지역 교육단체와의 갈등은 여전히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무궁하다.

당초 시교육청은 "돌봄 가정 학부모들의 급식 고충을 해소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이 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으나, 현재 대다수 학교의 급식이 직영방식이 아닌 위탁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 730명 중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학비노조가 대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시교육청이 지역 교육단체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도사락으로 아이들의 끼니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방학 중 무상급식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 학생·학부모·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펼쳐기를 기대해본다.

광주지역 교육단체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방학 중 급식'이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범 추진된다.

방학 중 무상급식은 이정선 시교육감의 2호 공약으로 학교 급식실을 통해 직접 점심을 제공하는 직영방식과 외부업체에서 도시락이나 단체음식을 학교로 배달해 식사하는 위탁방식으로 이뤄진다. 급식 대상은 초등학교 150개교, 유치원 126곳(병설 114원·단설 12원) 등 유·초등학교 약 1만여 명이다.

급식 방식은 급식 학생 5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 급식을 원칙적으로 하고, 50명 초과 학교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직영 또는 위탁 급식 등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위탁 급식 단가는 한끼 7,500원으로,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기본 급식인력 3명(영양